주52시간제 기업 현장 안착 '온 힘'

도, 현장 대응방안 보고회 업종별 추진상황 등 점검 우범기 정무부지사 "지속 관심·소통으로 안착 지워"

전북도가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주 52시간 현장 대응 방안 보고회'를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업종별 추진상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

도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 으로 시행됐지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 로 일부 업종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노·사 부담을 완화하고 주 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 준비 동향, 도 대응계획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보고, 각 실·국 관리 업종별 동향 및 지원 대 책 보고,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 이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이 기업은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9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준 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 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0 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7월부터 는 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될 예



전북도가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주 52시간 현장 대응 방안 보고회'를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업종별 추진상황 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의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 한 기업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 표한 '주 52시간제 준비실태 조사' 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500개 사) 중 준비 중인 기업이 18.4%, 준비 여건이 안 된다는 기업이 7.6%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각 실・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 항을 적시 파악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지원하 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 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몰 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 종별 협의회, 업무 회의, 현장 지도시 정부 및 자체 지원시업을 적극 홍보 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대 책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특 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일하기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 신규채용 및 임 금 보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교대 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 컨설팅 지원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을 위 한 고용서비스 강화 ▲공정개선,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준비 취약 기업을 발굴해 공인노무사로 구성되 전문가 컨설팅 등과 연계해 현장 안착 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우범기 전북도 정무 부지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지속돼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 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대응 주관부서장인 김 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업종별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도, 오늘 '서해수호의 날' 비대면으로 진행

전북도는 26일 '제6회 서해수호 의 날 기념행사를 비대면 추모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기념일로 제 정하지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 전 · 천안함 피격 · 연평도 포격 도 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범국민 안보의식을 북돋 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는 정 부기념일이다.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 황을 감안해 기념행사는 비대면으 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전 역에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 호의 날'이라는 주제로 60여 개 현 수막을 게첨하고 그 뜻을 기릴 예 정이다.

또한,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주, 정읍, 부안 재향군인회관 등의 전 광판에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군 장병의 명예 선양과 한 반도 평화 수호의 의지를 모으는 ▲유족에게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 전달, ▲국군에게는 평 화수호 의지를 다지고 사기진작, ▲도민에게는 애국십 함양을 통한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의 메시 지를 전파한다. /유호상 기자

생동감 넘치는 전주 변화 기대감 고조

민주 김윤덕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 주갑)이 대표발 의한 빈집 및 소 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 차 운수시업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3건 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시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도심과 구도심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빈 집정비시업 시행에 따른 수용・시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 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 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그동 안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미비하였던 기존 제 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은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시를 5년마 다 시행, ▲시장·군수 등이 공익상 유 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함께, 수소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화물 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시업자의 수소 자동차 운행 활성 화를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 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 전도사를 자임하는 김 의원은 "오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 안의 통과로 미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열 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수소상용치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 완주의 현대자동 차 전주공장의 청신호가 켜지며, 지역 경제 발전 및 육성에도 이바지할 것이 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전북 시 · 군의장들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을"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 주시의회 강동화 의장)는 25일 익산시 의회에서 제261차 전북시 • 군의회의장 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 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회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 스터와 완주 산단 간 화물물동량의 기 하급수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제4 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 안을 반드시 반영해 기존 도로 중심의 물류 체계에서 철도수송 체계로의 대전환 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화폐 포함

민주 신영대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 산)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 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 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시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로 하 여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의 거래 및 가치가 급증하면서 일각에 서는 가상자산이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도 재산등록 대상에는 포함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특히,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탈세 목적 등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 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사업소득 수 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ㆍ증여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 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 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가산자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었으나, 25일 가상자산의 정 의 규정을 신설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시행된 데에 따라 이를 준용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 공직자의 재산 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거래가 활성화된 시대 흐름에 맞 춰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개 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역대 의원은 "가상자산이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민큼 공 직지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호상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 국회 통과

민주 이원택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 안)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 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 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비꾸는 것 을 골자로 하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 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 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 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 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 년이 지난 날부 터 시행된다. 하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집중 된 권한을 분산

이번에 개정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 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 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 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12 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뤄져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 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해기사 음주축정 거부시 면허취소 처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선박직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선전 전주시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박선전 전주시의회 의원이 25일 "미 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는 지난달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 데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 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

행되고 있는 릴레이 챌린지다. 이날 박 의원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미얀마 군부 의 폭압에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참담 하다"면서 "미얀마 군부를 향해 국민 들을 향한 총부리를 즉각 거두고 민주 주의라는 시대적 사명을 더이상 저버 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 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만 이 지난 2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해기시들의 해상 음주 측정 거 부를 원천차단해 해상음주운전 사고 를 감소시키고,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원활하게 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 로 기대된다.

개정 전의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 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 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음주를 한 경우, 해양경 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 뤄지면 당연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 져야 하지만, 해기사가 음주측정을 1 차 거부할 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 처분을 받을 뿐이었다.

정 의원이 개정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해기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주취자가 음 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 분을 내리고 있어 기존 선박직원법과 같은 문제들을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 가 존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에 나선 후 5개월만에 해상음주측정 원천 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측정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 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 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국민의힘 전주 동행의원 보좌진, 전주시와 예산 간담회

호남동행 의원들의 동행 지역 방문 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행보좌진들 사이 에서도 호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시 동행의원 보좌진들 과 전주시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주 현안사업 논의 및 2022년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운천 국민 통합위원장 보좌진과 박진 · 송언석 · 추경호 · 김승수 전주시 동행의원 보 좌진, 전주시 정무보좌관과 기획조정 국장, 실무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특례시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전주~김천 간 철도 확충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도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국가지원 등 전주시의 현안 사업 추진과 ▲XR융합 전주 오프닝로드 조 성시업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 업 허브 구축 ▲국립 K-무형유산 한 류체험관 건립 ▲후백제 실감영상관 및 콘텐츠 조성,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조성 등 국가예산 확보 사 업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 /유호상 기자 력 방안을 모색했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TF 단장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 단장에 위촉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 회)는 최근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 진TF를 구성하고, 위원 5명을 위촉했

단장은 송 의장이 맡았으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병석 울산시의 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고 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TF위원에 선 임됐다.

송 의장은 "앞으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에 지방



의정연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 정부 · 대국회 건의 및 협의활동을 펄 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